

# 교역 2000억달러 목표...李, 인도·베트남 5박6일 순방

인도 총리 초청... 19일부터 2박3일 AI·조선·방산 등 전략 협력 확대

베트남 포럼 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인프라·원전 등 국가 핵심 분야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 내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냐 자이산카르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약식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회담에선 한국과 인도 간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모디 총리 주최 오찬과 한·인도 경제인 대화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국빈 만찬으로 인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인도 방문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교'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청와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

출도 기대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AI(인공지능),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물꼬를 트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인도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24일 3박4일 일정으로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신임 지도부의 첫 국빈 행사이며, 지난해 8월 포럼 당 서기장의 방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하노이에 도착한 뒤 22일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뒤 베트남 지도부와 공식 환영식을 갖는다. 이어 포럼 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23일에는 팜민찐 총리와 면담하고, 쯔타인민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후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며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24일에는 포럼 당 서기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베트남 방문 기대 성과로 ▲상호 방문 조기 실현을 통한 최상의 파트너십 구축 ▲한·베트남 전략적 경제협력 고도화 ▲한·베트남 간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 등이 꼽힌다.

특히 경제 협력에 대해 위 실장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하고 상호 관심 품목 교역 활성화 조치를 공조하고 인프라, 원전 등 국가발전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이 대통령 "국가,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 존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의원

현직 최초 세월호 기억식 참석 "국가 책임 강화·신뢰 회복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다시 4월16일이 됐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다 담아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이 추모 합창 공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는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똑똑하게 목도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차관급 정무직·정부위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차관급 정무직 및 정부위원회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일 의원연맹 회장과 주(駐)일본대한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 1월 이혜찬 전 수석부의장의 별세로 공석이였다.

이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근대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파를 초월해 평화 협력을 추진해 온 국가 원로"라며 "한일 의원연맹 회장, 주일 대사 등을 통해 쌓은 외교적 경험을 통



일 담론에 담아 통합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기욱 한성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수석은 "한국 구술사학회장, 한국사회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한 역사 사회학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이산가족 문제, 국가폭력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한 과거사 규명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가 위촉됐다. 이 수석은 "한국환경연구원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을 역임하는 등 환경·에너지 분야의 이론과 정책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라며 "기후·에너지·밸류를 아우르는 국가 위기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 전문가"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 1면 '한국판 국부펀드'서 계속

## 국산 조달 확대·K-엔비디아 육성

현재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화 리스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

일단 국내 핵심 역량 유출 차단을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비(非) 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

민관협력 혁신 생태계인 '마더팩토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되어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전 대변인은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수출금융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에너지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하여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술과 규제 간에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新) 산학연 협력 체계 및 정부&민간 공동 투자 방안이 언급됐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경제의 구축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서예진 기자

##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처리"

선거구 확정 등 정치개혁 법안도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30여 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확정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 등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 시한인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야 양당은

의했다"며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운영수석부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17일(본회의에 앞서) 정계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개혁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논의 중인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서양진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득권 양당의 누더기 법안"이라며 "표심을 왜곡하는 구조를 방지하고,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만 보존하려는 계산기 소리가 국민에게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